

제15차 통일과 여성포럼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모색

2014. 8. 28.(목) 15:00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Unification &
Woman Forum

주 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개성공단포럼

후 원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여성신문사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모색’을 주제로 개성공단포럼과 함께 『제15차 통일과 여성 포럼』을 개최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여성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과 공감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그동안 정치·경제분야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온 통일 관련 정책을 여성 시각에서 재조명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국정기조인 ‘평화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여성부문 의제 개발과 여성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박근혜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15차 통일과 여성 포럼』은 통일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논의를 선도해온 개성공단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금번 포럼이 통일분야에서 여성의제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북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실천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뜻과 열기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 8. 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직무대리 **김 태 홍**

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이 상 만**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통일관련 논의를 선도해온 개성공단포럼과 함께 오늘 ‘제15차 통일과 여성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사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이상만 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동안 정치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온 통일 관련 정책 역시 여성의 시각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모색”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의 대북 3대 제안을 구체화 시켜 북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통일준비과정에서 남북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감과 동시에 통일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남북이산가족 간의 증여, 유증, 상속 등의 재산관계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통일 분야 여성·가족의제 발굴 확대와 통일비용 절감을 통한 통일준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관련 이슈를 선도해 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부터 통일과 여성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4년 통일과 여성포럼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를 해주실 최금숙 전 원장님과 좌장으로 참석해주신 이연숙 전 정무 제2장관님, 그리고 귀한 시간 내시어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참여 관계기관 및 관계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우리가 염원하는 남북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8. 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직무대리 **김 태 홍**

축 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김선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오늘, 북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로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상속재산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통일과 여성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 이후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통일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은 남한의 경제력·기술력과 북한의 자원·노동력이 합쳐진 인구 8천만의 거대 시장을 보유한 나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활발한 통일 담론을 바라보며, 경제·외교·군사 분야에 비하면 여성과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가족정책은 지금의 통일담론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남녀 양성평등을 포함한 사회 통합과 수 십 년간 끊어졌던 남북한 가족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개성공단포럼이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 간 상속재산 문제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포럼을 개최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에서 논의의 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는다면, 통일 이후 많은 이산가족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가족 신탁청 창설과 기금형성에 대한 오늘의 논의가 향후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이면 어느새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오늘 주제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드레스덴 선언’은 남북분단 70년 세월 동안 남북간 대립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기제라 생각합니다.

제15차 통일과 여성포럼에서는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의 대북 3대 제안을 구체화시켜 북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모색해 나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에 북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관련 여성·가족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애쓰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제시해주시는 개성공단포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생산적인 제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김 선 향

프로그램

사회: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장 직무대리)

15:00-15:10

인사말씀

- 개회사 :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직무대리)
- 축사 : 유종근 (대한적십자사 총재)

15:10-15:30

발표

통일비용 절감을 위한 제언: 북한가족의 남한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의 제안
최금숙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 이연숙 (전 정부 제2장관, 전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15:30-16:40

토론

- 이상만 (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 김애실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대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김성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국장)
-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권영경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 김해순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 도경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이상 무순

16:40-17:00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

목 차

발 표

- 통일비용 절감을 위한 제언:
북한가족의 남한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의 제언 1
- 최금숙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이상만 (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14
김애실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15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대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7
김성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국장)	19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22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24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5
권영경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27
김해순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29
도경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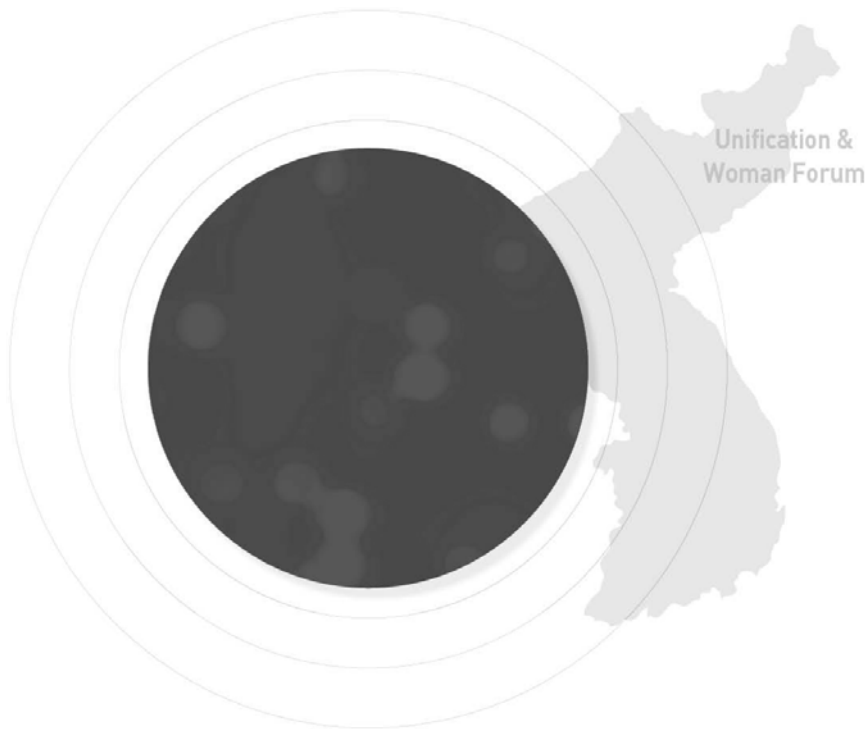
발표

제15차 통일과 여성 포럼

**통일비용 절감을 위한 제언:
북한가족의 남한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의 제언**

최금숙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제안의 배경

1.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의 기쁨을 누린 것도 잠깐, 다시 38선의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또한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 1953년 휴전으로 군사분계선에 의한 분단이 이루어진지 약 60여년이 되었다. 독일은 동·서독 분단을 극복하고, 1990년 10월 통일을 획득하였으나, 현재 우리는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문화적·경제적인 남북교류·협력이 매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남북한 관계는, 출입이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이 2013년 9월 다시 열리고, 박근혜대 통령이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을 언급한 이후, 수년간 막혔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었으며,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남북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¹⁾

남북 이산가족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12만9410명이고, 상봉 신청자 중 실제로 상봉에 성공한 숫자는 2014년 현재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산가족의 대부분이 고령자이므로 이산가족문제는 시급성을 다투는 현안 중 현안이다. 2014년 2월 제19차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열렸다. 무려 3년4개월 만의 일이다. 그러나 상봉인원이 너무 적어 이산가족의 한은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 방식대로라면 상봉 대기자 7만2000명이 20년을 기다려도 만나기 힘들다고 한다. 10년 후에는 같은 세대 간 상봉이 사실상 어렵다.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 가족에 대한 상속, 증여, 유증 제도다.

통일을 이룬 독일은 초기에 통일후의 휴유증에 시달렸었는데, 통독 후 2년이 지난 후에도 ‘감정적 폭발력을 가진 이익충돌’, ‘사회적 불안정’ 등의 문제가 남아있으며,²⁾ 독일의 주도적인 정치적 엘리트들이 통일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였다는 생각이 많다고도 한다.³⁾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권터 그라스의 주장에 의하면, 통일의 문제는 서로 ‘통합’이 미흡한 가운데, 또한 그러한 노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그는 권고하기를 한국이 독일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분단된 두 체제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서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상대

1) 여성가족부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이래 2013년부터 시작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이르기까지 통일과정에서의 여성가족역할의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들을 모색해 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역시 북한여성지위,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여성의 생활 및 실태, 북한 이탈주민가족, 북한의 여성가족관련 법제 등의 연구를 하였다.

2)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불법청산현황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통일대비 법무세미나, 1993.5.4, 17-18면.

3) M. Donald Hancock, Helga A. Welsh; German Unification, Westview Press, 1994, p.288.

방의 역사에 대해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⁴⁾

하지만 통일을 이룬 독일이 통독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평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많다고 한다. 즉,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점, 통독 국민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등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독일의 경제시장이 현대적이고 글로벌화 된 점이 좋게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구동독지역에 산업이 적다든지 수출이 적어서 동서독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경제 상황이 주변의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 비하면 훨씬 사정이 낫다고 한다.⁵⁾

2. 통일비용 절감의 필요

한 통계를 보면, 통일에 찬성이 나이든 사람들에 비해 청년들에게서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중 한 이유는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⁶⁾ 독일 대사관의 한 서기관의 말을 빌리면, 한국 사람들의 통일비용에 대한 지나친 걱정 때문에 놀랐다고 한다. 그는 언급하기를,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까지는 1969년부터 1989년까지 동서독간의 교류가 매우 많았다고 하면서 이 시기에 서독은 ‘동방정책’을 펴면서 정치범을 금전을 주고 데려온 다든지 베를린에서 서독까지의 통행료를 낸다든지 하면서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한다.⁷⁾

이러한 주장은 우리 남북주민간 교류에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통일비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면서 남북간 많은 교류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갈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통일 준비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남북가족 간에, 특히 남북이산가족 간에 증여, 유증, 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 바이다. 통일준비비용은 세금으로 많이 충당될 것이지만, 본인의 주장은 사적인 재산관계에서 일부는 부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준비과정에서 남북가족의 재산관계 즉, 민사법관계도 역시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남북의 분단상황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민사적 법률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이산가족(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다⁸⁾) 및 친족간의 재산상속이 문제로 되고 있다. 북한에 남아있는 이산가족이거나 또는 강제이든 임의이든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은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의 유산

4) 동아일보, “노벨상 작가 쿤터 그라스에 듣는다”, 2001.8.21.

5) 2014. 8. 19. 한국유권자연맹 주최로 선거연수원에서 있었던 독일대사관의 올리버 스테릴링 서기관의 강연 내용.

6) 통일연구원 2014 홍보 자료.

7) 위 독일대사관 서기관 강연 내용.

8) 법률상 가족은 한 호적에 기재되는 자로서, 호주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산가족인 경우, 과거에는 한 호적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남한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든가, 기재되어 있었다더라도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재선고, 특례상의 실종선고, 또는 민법상의 실종선고에 의하여 호적에서 제적되어 있을 수가 있다.

에 대하여 상속권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해 있으므로 이것이 문제이다. 물론 북한에 있는 재산에 대한 남한주민의 상속권도 역시 문제로 되지만, 이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북한주민의 상속권의 보호를 주장하는 私見이 북한소재 재산에 대한 남한주민의 상속권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오해되지 않길 바란다).

생각건대,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므로(헌법 제3조),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통일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와 별도로 현재 북한주민이 우리의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예컨대 남한에 유산을 남겨놓은 피상속인 A가 북한에 부모,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남하(또는 탈북)하여 남한에서 재혼을 한 경우라면, A가 남한에서 이룬 재산상의 성공을 남한의 배우자와 자녀들뿐 아니라 북한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북한의 가족 및 친족들이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면서, 재산을 얼마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북한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들에게 얼마간의 재산이라도 전달하고자 한다든지, 그들에게 얼마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의 상속인들은 그들의 권리로서 상속권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의 대법원판례⁹⁾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 있어서 “망 000에게 . . . 직계비속인 딸이 한 사람 더 있었다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주민의 상속권은 우리의 여러 법제도, 특히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부재선고(不在宣告) 및 실종선고 특례(失踪宣告 特例), 그리고 민법상의 실종선고 등에 의하여 무시될 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므로 북한가족의 상속권 보호를 위하여, 현재 이와 모순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그에 따른 법개정 내지는 법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분단상황 하에서 북한주민의 상속권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도 발생된다. 현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은 이미 사망하거나 고령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도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 글은 이러한 기본적 시각 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남한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북한주민의 상속권이 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 및 법제정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9) 대법원 1982.12.28, 81다452,453 판결 재산상속지분확인.

3.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¹⁰⁾ 제1조(목적)는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¹¹⁾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분단의 종료”란 남북한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 하나의 국가체제를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4. “자유로운 왕래”란 남북한 사이에 서신과 통신의 왕래가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되고, 상호 방문에 있어 외국에 비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5. “남북이산”이란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가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II. 문제의 제기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 살다가 남한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산을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함에 있어서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문제된다. 이는 북한의 상속인의 생사가 불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의 상속권이 부정될 수 없고, 그에 따라 그의 상속분 역시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¹²⁾

10) [시행 2012.5.11.] [법률 제11299호, 2012.2.10., 제정]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최근개정 2009.1.30)’도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주민’이라는 용어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면,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12) 대법원 판례(1982.12.28 선고 81다452,453 판결 재산상속지분확인사건)는 북한주민의 생사가 불명하더라도 그에게 남한 소재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의 법정상속분을 인정하고 있다.

남한 소재 財産에 대한 북한가족의 상속권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문제점을 간단히 언급하고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제목을 달리하여 뒤에서 논하고자 한다.

(1) 현재 현행법에 따라 북한가족의 상속권은 인정되는가?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영토이므로 북한가족의 상속권은 우리 민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토대 위에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2012년 2월 10일 제정(시행 2012.5.11)하게 되었고, 이로써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제1조 목적)”를 남한이 하게 되었다.

다만, 그들의 상속권의 행사는 생활비 정도만 북한으로 반출되는 상태에 있으므로, 그들의 전체 상속재산이 통일이나 남북간 협력시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상속권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상속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가 새로이 요구되는 것이다.

(2) 북한가족의 상속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면, 통일이나 남북간 협력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들은 어떻게 상속권의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현재 북한가족은 남한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아예 상속이 개시되는 지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북한에 있는 상속인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족, 친지 등이 남한에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 등이 아울러 있게 된다.

(3) 북한가족의 상속분(상속재산 전체)을 통일이나 남북협력 시까지(또는 그들에게 줄 수 있을 때까지) 별도로 또 효과적으로 정부가 관리해 줄 수는 없을까?

현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상속인인 북한가족의 생활비 정도만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고(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 나머지 재산을 일정한 재산관리인(정부가 아닌 사적관리)이 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 관리가 효과적이지 못하다. 즉 그들의 상속분을 통일이나 남북협력 시까지 특별히 관리해 줄 별도의 기관(남북가족 신탁청)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4) 부재선고 또는 실종선고 등에 의하여 북한주민의 상속권이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들 제도들은 남한주민 위주로 제정·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북한가족인 상속인의 문제로서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북한가족인 상속인에 대하여 우리의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부재선고 및 특례상의 실종선고, 민법상의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선고들의 효과는 ‘사망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북한주민에 대하여 이러한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북한주민은 상속권에 있어서 불리한 처지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 문제이다. 즉, 이들 선고의 효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상속에서 배제된다든지, 그들의 대습상속권이 완전히 무시될 수가 있는 것이다.

(5)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개정 내지 법제정이 있어야 하는가?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부재선고와 실종선고 특례는 북한주민의 상속권에 서 보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며, 또한 민법상의 실종선고도 그 효과와 관련하여 역시 북한주민의 상속권이 무시될 수가 있다. 이들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이들의 법개정이 요구되고, 나아가 북한가족의 상속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특별히 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Ⅲ.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가족(호적상 가족) 및 친족이 이산된 경우가 많다. 이들간의 호적을 정리하고 혼인 및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67. 1. 16. 제정되었다.¹³⁾

이 법의 신규제정이유를 보면, 미수복지구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취적(호적취득)한 자중 미수복지구의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와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이 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절차에 관한 특례 및 이중호적의 정리에 관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내용을 밝히고 있다.

①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잔류자임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도록 함.

②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호적에서 제적되도록 하고, 이 경우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③부재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사실 또는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본인·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도록 하되, 부재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행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④부재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1월이상의 공시최고를 하도록 하고, 이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함.

⑤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8일 사이에 미수복지구이남의 지역에서 그 주소나

13) [시행 1967.1.16.] [법률 제1867호, 1967.1.16., 제정]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재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⑥실종선고에 있어서는 1월이상의 공시최고를 하도록 하고, 이는 가정법원과 부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함.

⑦이 법 시행당시 2이상의 호적에 취적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후에 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호적을 말소하도록 함.

위의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피상속인은 북한에서 남하하여 남한에서 살게 되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북한주민으로서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잔류자”(제2조 제2항)가 된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1945년 8.15 해방과 1953년 휴전 사이에 남한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남북되었다든가 자진 월북하여 북한주민이 됨으로써 위 특별조치법상의 “부재자”(제2조 제3항; 민법상의 부재자와 다른 개념이다)가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이들 잔류자 또는 부재자에 대하여 부재선고 또는 실종선고가 내려질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들 잔류자 또는 부재자는 호적상 제적된다든지 상속의 개시에 있어서도 ‘사망’으로 처리되어 그들의 남한에서의 상속권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특별조치법이 그 동안 남한주민의 법률생활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북한주민의 법률생활을 위한 기능도 아울러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부재선고 및 특례상의 실종선고제도, 민법상의 실종선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북한주민들이 상속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 즉 부재선고나 특례상의 실종선고를 받는다하더라도 혼인이 효력이 없어지거나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부재선고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구)호적이 제적되는 과정에서 제적되는 (구)호적에 그 기록을 남기도록 하며, 이들의 (구)호적은 잔류자호적부로 별도로 관리하여 북한주민이 나중에 그의 상속권 및 상속회복청구권 등의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남북가족의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가칭)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의 제안

북한가족인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누가 관리해 주는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그들의 상속권의 행사는 생활비 정도만 북한으로 반출될 수 있는

상태(법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에 있으므로, 그들의 전체 상속재산이 통일이나 남북간 협력시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상속권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상속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가 새로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행 민법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민법 제22조)가 있지만, 민법상의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부재자에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잔류자(殘留者)’ 또는 ‘부재자(不在者)’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대법원 1971.10.22. 71다1636 손해배상 참조),¹⁴⁾ 민법상의 부재자재산관리제도는 북한주민이 그 대상인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다. 즉 민법상의 부재자재산관리제도는 단지 재산관리인을 통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지만, 이는 한국전쟁 등으로 장기간의 분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북한주민이 그 대상인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나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처분을 법원이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청구권자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북한주민을 위한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기에 미흡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북한주민인 상속인의 상속분을 관리해 주는 특별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일명 ‘남북가족 신탁청(信託廳)’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며,¹⁵⁾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그의 상속분을 이 신탁청에 그의 명의로 신탁을 하도록 하며, 신탁청은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남북협력이 가능해져서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까지 그 재산을 관리해 주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신탁청은 독일에서의 ‘신탁청(信託廳; Treuhandgesellschaft, The trust agency)¹⁶⁾과는 그 설립 목적이 다르다. 즉 독일의 신탁청은 동독에 소재하는 재산(또는 기업)에 대한 사유화를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그 설립목적이지만, 여기에서의 신탁청은 남한에 있는

14) 대법원 1971.10.22. 71다1636 손해배상

【이 유】 원고 박성화가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가 아니고 이복에 잔류한 자로서 제적될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으로서 원고 박성화를 부재자로 한 본건 재산관리인 선임은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5) 법무부, 통일독일·동구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1994, 413면 이하. 독일의 신탁청은 사건에 의한 신탁청과는 설립목적이 다르지만, 그 조직 등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신탁청에는 신탁청이사회(Vorstand der Treuhandanstalt), 신탁청관리위원회(Verwaltungsrat der Treuhandanstalt), 신탁청지사(Niederlassungen der Treuhandanstalt), 자회사(Tochtergesellschaften) 등이 있다.

16) Hancock, op. cit., p.205; 법무부, 통일독일·동구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1994, 392면 이하(신탁청). 독일의 信託廳(Treuhandgesellschaft)은 1990.3.1. 인민소유재산에 대한 사유화와 재조직화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 회사는 공적 소유의 성격을 가지는 회사이고, 동독의 토지, 임야 등(8,500 VEBs와 Kombinate 포함) 인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990.6.17. 신탁법의 제정으로 신탁청의 설립목적과 임무가 변경되었다.

북한주민의 상속재산을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 그 설립목적이다.

남한주민인 공동상속인은 북한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위에서 언급한 신탁청에 신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만일 남한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신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신탁재산이 북한주민인 상속인의 상속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대신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즉 그러한 청구는 북한 상속인의 8촌 이내의 친족(범위가 넓을 필요가 있다), 검사, 기타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관계인’(절친한 친구, 이웃 등) 등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받은 상속분은 북한의 상속인의 명의로 신탁청에 신탁을 하도록 하면 된다.

‘(가칭)남북가족 신탁청’에 신탁된 북한가족의 상속분은 통일 이후 일정한 시기가 지나도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들의 반환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남북가족 신탁청’에 관련된 규정들은 위에서 그 제정을 제안한 ‘(가칭)남북가족의 상속보호를 위한 특례법’ 내에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가족 신탁청’이 신설되면 이 신탁청이 본격적으로 북한가족의 상속재산을 관리해 줄뿐 아니라 이산가족이 된 남한 가족이 북한가족에게 재산을 증여, 유증을 해 줄 수도 있고, 전 국민이 북한친척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증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그야말로 ‘통일 대박’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무료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고령의 남한 아버지가 북한의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 사망에 문의하며, 남한의 가족에게는 비밀로 북한 가족에게 재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도 한다. 남북이산가족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서로간에 재산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남한의 재벌가가 아들 넷이 모두 북한에 있는데 그들에게 한 푼도 재산을 남겨주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그의 묘비는 “내 아들 보아라 . . .”는 말로 시작되는 유언이 길게길게 새겨져 있다. 우리는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V. 일명 “남북가족의 상속보호를 위한 특례법”의 제정 제안

남한의 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때에는 북한의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의 사망의 사실, 또 상속재산이 있는 사실 등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 그리하여 북한가족인 상속인은 상속에서 배제된 채, 남한의 상속인들만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로써 북한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의 상속권은 아예 무시당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현재 남한에 있는 친족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북한가족인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의 절차에서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은 무시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북한가족인 상속인의 상속권의 보호는 무방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의 권리행사는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겠지만, 이미 상속재산이 남한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그들이 유용하고 난 이후라면, 남한의 상속인들은 분단상황에서 “선의(善意)로 이를 유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들의 주장은 인정되어 북한주민인 상속인의 상속권은 빈껍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위의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재선고 및 특례상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나, 민법상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의 ‘선의자(善意者) 보호규정’(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29조)을 상기한다면 북한주민의 ‘속 빈 강정’식의 상속권의 보호문제는 불을 보듯 환한 일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북한주민이 생사불명인 경우 뿐 만 아니고,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그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이들의 상속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상속의 상속이 거듭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에 이미 사망하였지만, 대습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대습상속권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상속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도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오랜 시일 후의 권리행사가 되어 그 행사기간에 제한이 문제될 수 있었으나,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일반의 상속회복청구권과 동일하게 처리될 수는 없으므로 그 행사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이 이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때까지 유예되는 권리임을 분명할 것이 요구된다. 북한주민의 상속권이 참칭상속인(거짓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되더라도 통일 후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상속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기간은 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에게는 이와 같이 상속권 또는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인정되어도, 그가 남한에 있다면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매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북한주민의 상속권, 상속회복청구권 등의 행사는 현재 남한에 있는 친족, 검사 또는 기타 관계인들이 이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일명 ‘남북가족의 상속보호를 위한 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의 제정을 제언을 하는 바이다.

Ⅵ. 글을 맺으며

위에서 남북한의 통일준비를 생각하며 또한 통일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북한 주민의 상속권 보호를 위한 몇 가지를 고찰하여 보았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 내이고,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그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의 상속권은 사실상 무시되고 있으며, 때로는 법률상의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상속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도 2012년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북한가족의 상속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북한에 반출될 수 있으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 속에서 생활비 정도만 가능하므로 그들의 전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재산 관리인을 통한 관리는 매우 미흡한 제도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재산을 관리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한 ‘남북가족 신탁청’의 신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부재선고 및 특례상의 실종선고제도, 민법상의 실종선고제도 등은 남한가족의 법률생활에는 유리할 수가 있지만, 그 선고의 대상자가 되는 북한가족에게는 그들의 상속권이나 대습상속권 등이 배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민법상의 관련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위에서 하였고, 나아가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법으로서, ‘(가칭)남북가족의 상속보호를 위한 특례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주민의 상속분을 맡아서 통일 후 그가 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를 관리해 줄 ‘남북가족 신탁청’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독일은 ‘통합’이 채 이루어지기 전에 ‘통일’이 이루어진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¹⁷⁾ 동서독간의 통신의 채널은 1980년대 후반에 확대가 허용될 때까지 심한 제한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현재는 많이 극복되었지만, 그동안 서로간의 물질적 차이보다도 문화적 차이가 통일된 독일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었었다고 한다. 동독인들은 통일 몇 년이 지나도 개인이 자신의 생활에 커다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서독주민뿐 아니라 동독주민도 2019년까지 통일을 위한 세금부담)는 정치체제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¹⁸⁾ 하지만 현재 통일독일은 총리와 대통령이 모두 동독 출신이 되는 등 많은 통합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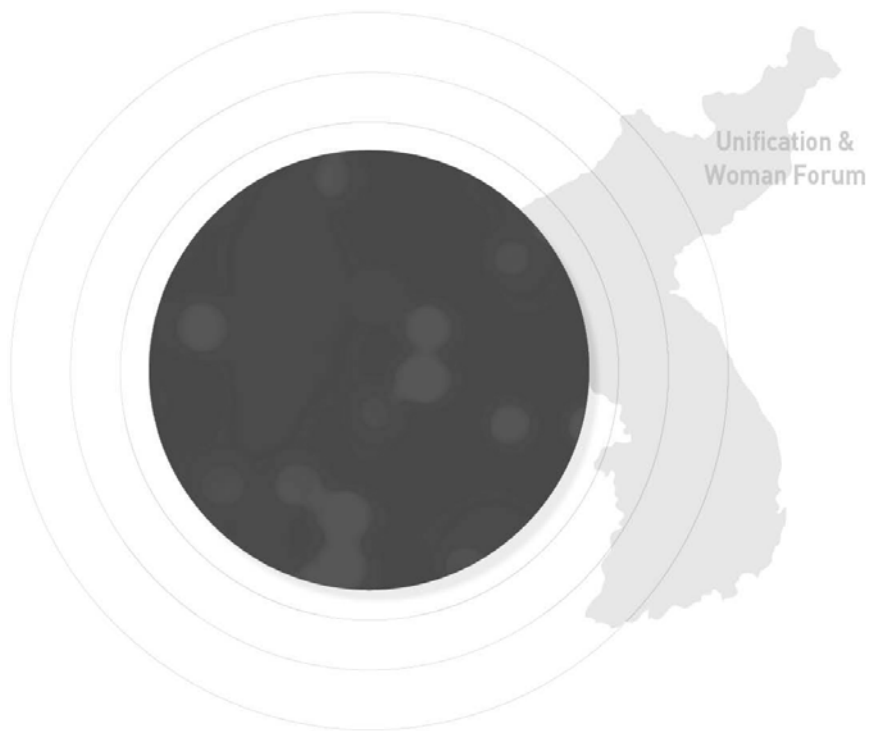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남북한간의 ‘통합과정’을 먼저 거친 뒤, ‘통일’을 이루게 되길 바란다. 이 제안이 북한주민의 상속재산을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일조를 함과 아울러 통일비용을 감축시키고 남북가족간의 신뢰를 구축하며 남북주민 간 사회적·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17) Hancock, Welsh, op. cit., p.316.

18) Hancock, Welsh, op. cit., p.307.

제15차 통일과 여성 포럼

토 론 문





토론문

이상만 (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 남북 분단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당한 분들은 남북 이산 가족들이다. 그리고 이산가족들이 점차 고령화 되면서 재상봉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상봉 할 수 있는 가족들의 수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는 재상봉 뿐만아니라 생사확인, 서신 교환, 유언 녹화 등 다방면에 걸쳐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다.
- 그중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이산가족들이 북에 두고 온 재산권 문제와 북한가족에 대한 상속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통일시 남북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보다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 통일비용의 절감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북한 가족의 남한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남북 가족신탁청 신설의 필요성과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한 점은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다.
- 상속 재산 관리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준다는 측면과 동시에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재산 형성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통일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소득 격차 축소에도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이다. 통일 후 남북 주민들 간의 소득 격차축소는 통일정부의 가장 큰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산가족들의 상속재산을 공동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은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다.
- 북에서 오신 많은 이산가족들은 그 근면과 성실함으로 남한 사회에서 부를 축척하신 분들이 많다.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일군 부의 일부를 분단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북의 가족들과도 나눌 수 있다면 이산가족들에게는 사후에도 가장 큰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일본의 조총련 사업가들의 경우 60년대 복송되었던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일본에 있는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조처들을 마련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이산가족 상속 문제는 재상봉 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법적 근거와 방안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론문

김애실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발제 요점>

발제자는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남한의 피상속인이 북한의 가족에게 상속·증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관련된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다.

발제자는 상속·증유에 관한 현행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 현행법으로 북한가족의 상속권은 인정되는가?
- 만일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 북한 가족의 상속분을 효과적으로 정부가 관리할 수는 없을까?
- 부재선고 또는 실종선고 등에 의하여 북한가족의 상속권이 무시되고 있지 않은가?
-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개정, 법제정이 필요한가?

발제자는 위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
- (가칭)남북가족의 상속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평 및 질문>

1.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감한다.

부재선고 또는 실종선고는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개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본다. 부재선고된 사람은 민법 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대하여 실종선

고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하여 부재선고가 내려지면 사망 혹은 실종자로 간주되어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대습상속권이 완전히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발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제자는 현행법이 아니라 1967년에 제정된 법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2009년에 개정된 법률안을 재개정을 제안하는 것인가? 이 법의 목적은 1967년도 제정법이나 2009년도 개정법이 비슷하고 법의 효과도 동일하지만 법의 적용 대상이 같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2009년에 개정된 법에는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이북으로 가 실종자로 표시된 사람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들의 상속권 회복은 가능한가?

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상속권자가 상속 사실을 모르거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문제에 대한 제안으로 발제자는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법 규정이 특례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제자의 제안에 동의한다.

3. 가칭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한다. 발제자는 북한 주민의 상속권이 특례법으로 보호 되더라도 통일이 되어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남한에 있는 상속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줄 특별기관인 신탁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신탁청이 신설되면 북한 가족의 상속재산을 관리해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재산을 증여·유증 해 줄수도 있고 남한 주민이 북한의 친척이나 주민에게 증여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정부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나 남북교류가 활발하지 못해서 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자는 1990년대 초반에 통일적금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 운동의 목적은 북한 아동의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거나 통일 후에 사적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모으고 민간 차원에서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데 있다. 최근에 이렇게 마련된 예금이나 성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신탁청의 신설을 통해서 민간차원에서 마련한 통일준비 예금이나 성금의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론문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대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 우선 “북한가족의 남한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 제안을 골자로 하는 이 논문의 참신성과 진정성에 대한 본 토론자의 깊은 감명을 언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통일시기가 과연 언제 도래할 것인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속에 놓인 분단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이러한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와 수용의 과정을 통해 과거 독일에서의 통독 이후의 갈등과 분열의 전철을 뛰어넘는, 물리적 통합이 아닌 사람들간의 사랑과 정이 바탕이 된 진정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연구자의 간절한 열망을 고스란히 녹여낸 논문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감동적이다.
2. 또한 논문의 참신한 발상도 매우 고무적이다. 현실적으로 ‘신탁청’의 법,제도적 위상과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으나, 누구도 미처 제기하지 못한 북한가족의 남한 상속재산권을 보존시키기 위한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기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평가 받을만 하다고 생각된다.
3. 다만 ‘신탁청 신설’이 본 연구자가 기대하는 것 만큼의 북한가족의 남한 상속 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으려면, 향후 좀 더 세밀한 보완적 장치에 대한 연구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통일이 수년 내 이루어질 것인지, 혹은 장기적 시일을 요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탁청에서 관리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한다든지, 남한가족이, 남한 재산상속과 연관된 북한가족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법으로 제정하여 강제이행의무를 통해 관철시킬 수 있는 문제인지는 섬세한 연구와 판단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4. 현재 21세기는 국내외적으로 성평등사회를 지향하면서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재해석하고, 성인지적 관점이 모든 정부 정책에서 관통되어야 한다는 대 원칙을 실천, 실행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평화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한 여성부문의 의제개발과 여성역할 강화가 시대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여성의 눈’으로 남북가족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남북통일의 밑거름의 방식을 제안한 것이며, 통일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 범주를 확장시킨 것으로 평가한다.

5. 향후 통일 분야에서의 여성들의 역할 증대를 위해선 무엇보다 민간차원에서의 남북여성 교류의 장을 활발하게 이루기 위한 각 전문분야별 의제 개발과 방식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토론문

김성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국장)

-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최근 북한 주민 상속권 소송이 분단과 이산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음. 분단상황에서 향후 제기되는 법적인 문제 특히 친족간의 재산 상속문제는 현 우리의 법률체계에서 다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임.
- 그런 점에서 발제문에서 제시한 북한 가족의 남한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과 ‘상속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제안한데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는 주제 발표가 아닌가 생각되고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가지는 문제해결의 한시성과 통일이후 사회적 통합문제를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봄.
- 특히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되어가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 주민과 이산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북한가족의 남한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 제안을 신선하게 받아들임.
- 다만, 상속과 관련해서는 분단으로 인한 특수성을 반영하되, 현실적인 부분과 법적인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남북가족 신탁청’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고 향후 상속회복청구권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몇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 우선 전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탁청을 만들어 이들의 재산을 관리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함.

- 신탁청 신설을 통해 통일비용을 세금이 아닌 민간이 부담하는 부분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음.
 - 왜냐하면, ‘남북가족 신탁청’을 신설하고 남한주민인 공동상속인이 북한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신탁청에 신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은 이산가족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
 - 분단 70년이 되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한 거주 사람 중 북한에 상속인을 남겨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산가족, 탈북자)
 - 무엇보다 남쪽의 이산가족들은 대부분 80대와 90대의 고령이고 재산권 문제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신탁청이 설치되어 상속분을 법적으로 신탁해야 할 경우 남쪽의 자녀와 가족들의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함.
- 2011년 정부는 생존한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이산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그 결과에 의하면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와 관련하여 재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가장 큰 문제는 ‘재산권 상속 등 재산관련 문제’가 45.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족관계 부(호적) 문제로 17.3%, 그다음이 중혼문제(19/2%) 등이었음.
- 그런데 헤어진 가족 및 친척에게 재산을 상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물은데 대한 답변으로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가 53.2%로 가장 많았고** ‘그때 상황을 보아서 선택하겠다’가 35%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적극적으로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답변은 9.2%에 불과함.
 - 또한 **재산상속 등과 유서를 남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는 남기지 않겠다가 8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남기겠다는 응답자는 11%로 낮게 나옴.
 - 이러한 이산가족들의 설문조사를 볼 때 ‘남북주민 신탁청’을 신설해 정부가 상속분 전체를 관리한다고 할 때 이러한 이산가족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최소한의 북한 상속인의 생활비 등 송금외 나머지 재산을 남북적십자사가 법정 신탁형식으로 관리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남북관계 상황 진전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 재산권, 상속문제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남북가족들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법적인 분쟁 발생시 북의 후손들이 가족인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이산가족유전자 검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2012년 8월 이산가족 대상 희망자 조사에서 이산가족생존자 75,699명중 21,914명 (28.9%)가 이에 동의하고 유전자 검사 및 보관을 희망하였음.
 - 향후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에 따른 추가 가족관계 확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전물질(DNA)을 추출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이산가족유전자정보DB를 구축하고자 준비하고 있음.
 - 금년에는 이들 중 1,200명에게 유전자 검사와 보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생존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효과가 클 수 있을텐데 아쉬운 점이 있음.
- 마지막으로 북한에도 남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들이 많음.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남쪽에 두고 온 가족 친척과 고향에 대해 한시도 잊지 않고 자식들에게는 통일 후 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유언을 남긴다는 말을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들었음. 이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봄.
- 신탁청 신설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법중 하나이겠으나 우선 남북간 교류를 하면서 가족들이 죽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하며 서신이라도 교환하도록 하며, 지금 당장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액을 북한 가족에게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으로 발전전인 교류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 통일 준비과정에서 남북한 가족의 재산관계 특히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북한 상속인들도 그들의 권리로서 상속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토론문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고 사회적으로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국민여론으로 즉각 반영되어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다. ‘통일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는 작년 54.9%에서 2014년 7월 55.9%로 거의 변동이 없다는 데서 나타난다. 아마도 국민들의 여론은 이제 단순한 통일열망과 기대만으로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불충분하며, 남북한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환경변화와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러한 실제적 삶의 변화 중 하나가 이산가족 문제일 것이다. 분단으로 이산된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고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통일준비가 아닐까.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이 정확히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1천만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산가족 1세대만을 따로 보면 1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산가족통합센터에 등록된 사람은 12만명 정도다. 10여년간의 이산가족 교류를 통해 2만5천명이 상봉하였다.

최금숙 교수님이 북한가족에 대한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제도가 필요하고 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법제도의 제정보다 더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봉과 방문에 대한 법제 마련이다. 서독은 통일 전에 이산가족과 친척들에게 가족, 친척들의 사망이나 혼인 등 ‘긴급한 용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방문이 허용되었고, 1년에 30일 혹은 60일의 체류를 허용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물론 우리 통일부도 우리 이산가족들에게 접촉과 상봉에 필요한 재정을 각 200만원,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 재정지원 외에 조금 더 적극적이며 전면적인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최교수님이 제의한 상속, 증여를 위한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도 이런 맥락에서 적극 준비해야 한다. 국내 입국 탈북자가 증가하면서 북한 내 가족에게 상속과 증여는 현실문제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탈북자 중에는 남한에 가족,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2014년 69.1%로 약

70%나 된다. 즉 이산가족들 중에 탈북자가 많다는 결론이다. 이산가족을 1천만으로 잡아도 15%인데 70%라는 비율은 매우 높다. 탈북자가 많아질수록 상속, 증여 등 가족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남북이산가족 상속, 증여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

이러한 법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법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남북당국간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 자칫 재산 때문에 탈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낼 수 있어서 북한당국이 적극 반대하여 정치적 마찰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탈북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당국과 협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미칠 남북관계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최교수님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러한 법적 준비를 통해 ‘통합과정’을 먼저 거친 뒤, ‘통일’을 이루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한반도형 통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베트남과 같은 무력점령 방식이 아니고, 독일과 같은 분괴와 흡수통일이 아닌, 남과 북이 적극 협력하여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창의적인 한반도형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개성공단이 바로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실용을 추구하는 한국적 지혜를 발휘하여 가족의 재결합을 통해 신뢰와 통합을 도모하고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와 동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제15차 통일과 여성 포럼

토론문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토론문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 가족의 남한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과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가족의 상속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를 다룬 본 발제문은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논의할 만한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임.
 - 필자도 지적했듯이 남북한 주민간 사회문화적 통합의 촉진, 남북가족간의 신뢰구축, 통일편익을 확대한다는 측면 등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도 필자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함.
- 북한 주민이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식이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내서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 판결로 상속 재산 문제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 과제가 있어 보임.
 - 우선 투명성 문제, 남측 재산이 북측 가족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느냐의 문제
 - 남측 재산을 북한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법의 문제,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북한으로 재산 반출이 가능함.
 -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탈북하거나,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남측 재산을 수령할 수 없음.
 - 법무부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음.
 - 즉 재산관리인이 남측 가족의 자산을 잘 관리해서, 북측 가족이 필요로 할 때 제때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임.
 - 법에 규정이 없는데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남측 가족의 재산을 현시점에서 다시 계산해 돌려줄 경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얼마 전 남한의 부모가 숨진 시점에 재산상속 대상인 북한 주민이 살아 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수십 년 뒤라도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결도 나온 바 있음.
-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북한 주민에게는 국내 민법이 정한 상속권 행사 시한(6개월) 및 상속권 회복청구 기간(10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임.
- 필자가 제안한 남북가족의 상속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현존하고 있는 남북한 주민의 상속재산특별법과의 관계 설정 문제

□ 결국 남북가족 신탁청 설립이나, 관련 특별법 제정은 언제 실현될지 모를 통일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통일 이전에 남북간의 신뢰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혀 친자확인소송, 북한 주민의 상속권 보호, 투명한 상속재산 관리 및 북측에의 전달 문제 등이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판단됨.



토론문

권영경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독일 통일 이후 처음 10년간 즉 1990년대에는 갑작스러운 통일로 인한 독일 통일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통일 후 불과 몇 개월만에 과거 동독의 기업 중 3분의 2가 문을 닫았고,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구동독주민들이 375만명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구동독의 기업, 공장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경쟁시스템에서 낙후되어 있었고 구서독의 기업들과 게임을 할 수 없었다. 90년대 당시 구동독 주민들의 실업율은 90년대 평균 15-18% 사이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25%를 넘어 구서독지역에 비해 2배이상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대규모 실업현상에서 최대 피해자는 40-50대 장년층과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통일 이후 급속한 사유화 과정과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제1순위로 해고되고 연금을 받으면서 임시직을 전전하는 비정규 근로자로 전락했다. 이들은 통독 정부가 갖가지 종류의 재취업 정책, 고용안정화정책, 투자촉진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취업자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국가에 실업수당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고 이로부터 가계소득을 보전해야 했다. 많은 동독주민들은 통일국가에서 사회적 피부양인구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적 소유제도가 사적 소유제도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구동독주민들은 자산소득을 통한 부의 축적 기회도 갖기 어려웠다. 이는 당시 통독정부의 사유화 방향이 다음과 같이 진행됨으로써 화폐자금이나 자본을 보유하지 못한 동독주민들이 새로운 체제의 자산소득자가 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선 첫째 통독정부는 ‘원상회복법’(Restitutionsgesetz)에 의해 나치 및 구동독시절에 국유화 혹은 몰수되었던 토지, 주택, 대지 등 재산을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현물반환(예외적으로는 현금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그 결과 많은 구동독 주민들이 그동안 점유·사용해왔던 점유권 및 사용권을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론 통독정부는 정당한 취득자나 점유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구동독 주민들은 미해결재산권 분쟁을 겪어야만 했다. 1996년 당시 구동독지역 5개 연방주 미해결재산관리청에 접수된 반환청구 소송건은 총237만 4000건으로서 아직 35%가 분쟁중이었다. 둘째, 국유기업의 경우 신탁관리청에 의해 빠르게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그 결과 90%

이상의 국유기업들이 구서독 자본가 및 기업가들에 의해 인수·매입 혹은 폐기(자기 기업과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을 사들여 폐기처분)됨으로써 구동독 주민들이 자본가로서 전환하는 기화가 드물었다. 셋째, 집단농장의 경우 농업조정법(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에 의해 그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개인농, 협업농,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농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동독 주민들에 의한 보유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오늘날 구동독지역의 자산보유 실태를 보면, 구서독 사람들의 보유 비중이 압도적이고, 투자자금의 95%를 서독의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서독 통일 이후 체제전환과정, 사유화과정에서 구동독주민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소득의 변화, 소유권의 변화는 오늘날까지도 구동독주민들이 자신들을 2류시민으로 느끼게 하는 주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각종의 조사들은 구동독주민들의 90% 이상이 결코 사회주의국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약 70% 정도는 스스로를 이등국민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구서독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연대세’라는 이름하의 높은 세금부담을 갖고 막대한 재정자금을 구동독지역에 지출한 것에 대해 구동독 주민들이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나름 타당성 있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국가의 통일과정에서 사회통합이 핵심적 요소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독일의 이러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규직 근로자로 살아간다는 것과 사회보장 혜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자존감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우월한 지역 주민들에게 대부분의 소유권이 부여되는 자산보유시스템은 심각한 상실감과 차별의식을 갖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한 통일 이후 불리한 위치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부의 보전 및 축적 문제를 소득증대 못지 않게 사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북한가족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구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발표자의 문제제기는 이에 대한 좋은 대비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가족의 남한 자산 상속권 인정 및 행사는 일부 북한 주민을 자산소득 보유자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도 동등하게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하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가족의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신탁청 설립 제안은 몇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고 본다. 우선 법적 가족 확인이 쉽지 않기에 피상속자가 사전적으로 유언으로 남기는 대상에 한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독립된 청 수준의 기관보다는 법무부에 마련되어 있는 한 기관내지 기존의 자산관리공사의 일부 조직에서 통일 이후 재산권 문제를 취급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고려된다. 그렇지만 발제자의 문제제기는, 우리가 통일대비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토론문

김해순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1. 최금숙 원장님은 통일담론에서 주요한 의제인 ‘통일비용절감’과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북한주민에게 재산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법적 토대 구축에 대해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통일준비비용은 적어도 일부는 사적인 재산관계에서 충당될 수 있고 남북한 재산상속관리를 위해 ‘남북가족 신탁청 신설’과 ‘남북가족 상속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실현가능하며, 실현이 된다면 북한주민의 상속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조화로운 남북한 통합을 위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뿐 아닙니다. 통일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여 통일 후에 올 수 있는 문제를 방지 또는 축소하는 데도 크게 한몫할 것으로 봅니다. 통일준비를 하지 못한 채 독일은 통일을 1990년 10월 3일에 맞았고, 통일 직전에 신탁청을 신설하여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2. 독일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미해결 재산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1990년 7월 17일 인민위원회에서 독일 신탁청이 세워진 것입니다. 신탁청은 ‘동독의 인민재산’을 신실히 관리하며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동독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실시하며, 기업경영 달성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취지는 좋았고 목적은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독 기업을 매각하고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기금 남용과 많은 경제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동독 국유기업의 시장경제로의 편성에서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1994년에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독일 신탁청에서 부상한 문제를 예방하면서 ‘남북가족 신탁청’을 체계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북한 주민의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며 상속재산을 시장경제로 편성하는 데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3. 이러한 긍정적인 신탁청의 기능이 있다고 해도,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재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예를 들어 관리자들의 비리에 의해 피해가 있을 경우 누가

손해를 보상해야 할까요? 독일처럼 신탁청을 폐쇄하는 것으로 국가가 임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4. 북한주민이 상속받을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 남한에 있는 가족에게 관리되어 적절한 시기에 북한가족에게 넘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경우, 남한 가족이 자유롭게 처분해도 북한주민은 통일 전까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남한가족에게만 맡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국가와 가족이 서로 협조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신탁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5. 이렇게 긍정적인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부상하리라 보며 이점을 질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우리 남한 사회를 보면 남남갈등이 심합니다. 이 점은 북한주민과의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남한 사회문화적 여건에서 ‘남북가족 신탁청’이 - 법적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한들 - 현실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어디에 기인할까요? 둘째, 독일에서 신탁청 기본 취지는 동독 국유재산의 ‘신실한 관리’와 동시에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여 수익을 낸다’는 인식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남한주민이 북한가족에게 큰 재산을 남긴다면, 시장경제의 수익원칙에 따라 이 재산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통일 전에 그 수익금 전부를 북한주민에게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셋째, 북한주민에게 상속된 또는 미해결 재산관리를 몇 년 동안 유효기간으로 두어야 할까요? 독일 경우를 보면, 많은 사람이 친인척이 존재한지도 몰랐고 그래서 유산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어떻게 처분될까요?



토론문

도경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상속, 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한 북한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남북분단의 현실상 북한주민이 그 재산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북한주민이 그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갈 경우에도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에서는 그 재산이 본인에게 갈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에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북한주민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그 재산이 북한 당국에 의해 군비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1299호, 2012. 2. 10. 공포, 2012. 5. 11. 시행) 시 북한주민 상속·수증재산 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속, 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북한주민은 반드시 남한주민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계유지, 질병치료 등을 위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북한주민이 직접 사용·관리할 수 있다. 이는 「민법」상의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처럼 부재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목적 외에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국가안보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표자가 제안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별도 기관(가칭 ‘남북가족 신탁청’)의 설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남한주민인 공동상속인으로 하여금 북한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신탁청에 신탁하도록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들이 북한의 유류분권자를 위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대신할 수 있게 하고 반환받은 유류분 역시 신탁청에 신탁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주민이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속·수증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남북한 간의 통신과 통행이 자유롭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여 사적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

일·대북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제안과 논의는 통일 준비를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접근방안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 북한주민이나 유언자에게 사실상 법정대리인인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것과 관련하여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바, ‘신탁청’을 통한 상속재산의 관리는 사적자치에 대한 제한이 보다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남북협력이 가능해져서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까지 그 재산을 관리해 주도록 하자는 것이면, 그 이전에는 상속재산이 북한에 반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현행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신탁청에 신탁하도록 하고 신탁청이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남한주민인 공동상속인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